

2060년 우리 아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기금』 고갈 전망에 대한 고찰

2014. 10.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원회)

目 次

I. 서론	7
II. 국민연금 개관	9
1. 국민연금의 개념	9
2. 도입과 발전 과정	12
III. 국민연금 징수현황	15
1. 기금 규모	15
2. 가입자 추이 및 적립금 현황	15
3. 기금운용성과	20
IV. 국민연금 지급현황 및 기금 재정추이	23
1. 국민연금 지급현황	23
2. 국민연금 기금 재정 추이	28
V. 국민연금운용의 문제점	35

1. 연금 구조적 문제 -----	35
2. 기금 운용상의 문제 -----	40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기간산정)에 따른 문제 -----	48

VI. 외국의 연금운용현황 ----- 55

1. 일본 -----	55
2. 스웨덴 -----	56
3. 칠레 -----	57
4. 미국 -----	58
5. 주요 해외 연기금 투자의 국가별 특성 -----	60

VII.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 65

1. 정부 대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	65
2. 민간 전문가 제언 -----	70

VIII. 결론 ----- 75

<참고문헌>

I. 서 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하여 시작은 늦었으나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 현재에는 그 규모가 세계 4위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하여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5.1%에 달하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13.5%에 비해 거의 네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생계가 막막한 노인층의 상당수가 폐지나 고철 같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교통사고도 잦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7.8명으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들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여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연금 지급 보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연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노후 생계유지가 될 수 없다는 계산 하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이는 임의가입자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은 기금 조성에 영향을

미치며 2060년으로 예정되어있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불신은 40대 미만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금 혜택을 받는 5,60대와 부양의 의무는 갖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2,30대간의 세대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1위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노후 생계 대책이나 복지 정책은 이 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증가되는 임의가입자 탈퇴와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4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연금 운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피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와 기금운용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방안을 본 백서에서 찾고자 한다.

II. 국민연금 개관

1. 국민연금의 개념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갈수록 저하되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방치했을 경우 대다수의 노인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적인 해결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1) 국민연금 특징

- 국민연금은 일정 기여를 전제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다. 연금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이며 제도 초기 예상지출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을 시 연금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기피 인구가 늘면 늘수록 노후 빈곤층이 증가하고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조세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후 대비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대비의 일부를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이다.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하였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2%에서 12.4%, 독일의 경우 5%에서 18.9%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였다(2013년 기준).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될시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을 보장하는데, 이러한 예는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1~3급, 4급은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하는 제도.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는 제도.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 가입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며, 가입할 의무가 없는 국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도입과 발전 과정

1) 도입 준비 시기 : 1960년대

-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을 통해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특정 집단을 벗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 그러나 1973년 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다.

2) 도입 및 실시 : 1980년대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 부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형성된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인구 구조가 소산다사(小産多死)형으로 바뀌었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및 사망률의 저하로 노령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나 노후 생계보장에 대한 대책은 개인 차원과 정부 차원 모두 미진한 상태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제고되었고, 물가가 안정되어 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 이러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수정, 보완한 국민연금법을 제정, 198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미국(1935), 영국(1908), 스웨덴(1913), 독일(1899), 프랑스(1905), 일본(1941)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졌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칠레(1924), 인도네시아(1977), 말레이시아(1951), 필리핀(1957), 베트남(1962)에 비해서도 늦은 시기이다.

3) 확대 : 1990년대

-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비교적 늦었던 것에 반해 확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한다. 그리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제도 도입 11년 만에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을 확장하였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나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적용이 제외되고,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연금보험료는 1988년 도입시 소득의 3%로 시작하여 1993년에는 소득의

6%로, 1998년 이후에는 소득의 9%로 점차적으로 상향되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체를 부담한다.

- 2014년 2월 기준으로 매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38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약 2,00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기간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구분	‘88~ ‘92	‘93~ ‘95.6	‘95.7~ ‘97	‘98~ ‘99.3	‘99.4~ ‘00.6	‘00.7~ ‘05.6	‘05.7~
사업장 가입자	3%	6%		9%	9%		
		퇴직금전환금(1/3)					
지역 가입자	-		3%			4%~8% (년 1%p)	9%

Ⅲ. 국민연금 징수현황

1. 기금 규모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5천 3백억 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이래 2014년 6월말 현재 그 규모가 446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적립금 성장 규모



[자료제공: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2. 가입자 추이 및 적립금 현황

1) 가입자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999년 도시지역 거주자 적용 확대로 크게 증가 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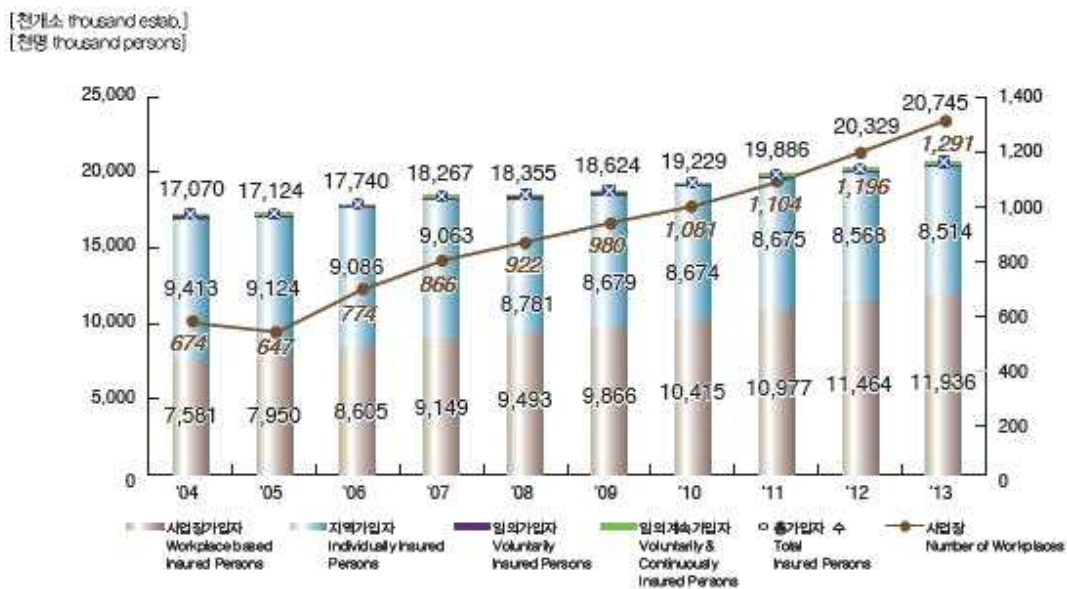
- 2013년 사업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최근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임의 가입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특히 여성의 경우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가입자종별,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임계
2009	합계	18,624	9,867	8,680	36	41
	남자	11,410	11,410	5,084	9	13
	여자	7,214	7,214	3,596	27	28
2010	합계	18,335	9,493	8,781	28	33
	남자	11,369	11,369	5,196	7	9
	여자	6,966	6,966	3,586	20	23
2011	합계	19,886	10,977	8,675	171	63
	남자	11,769	11,769	4,894	30	19
	여자	8,116	8,116	3,781	141	44
2012	합계	20,329	11,464	8,568	208	89
	남자	11,824	7,032	4,735	33	24
	여자	8,505	4,432	3,833	175	64
2013	합계	20,745	11,936	8,514	178	117
	남자	11,948	7,266	4,620	29	34
	여자	8,797	4,670	3,894	149	83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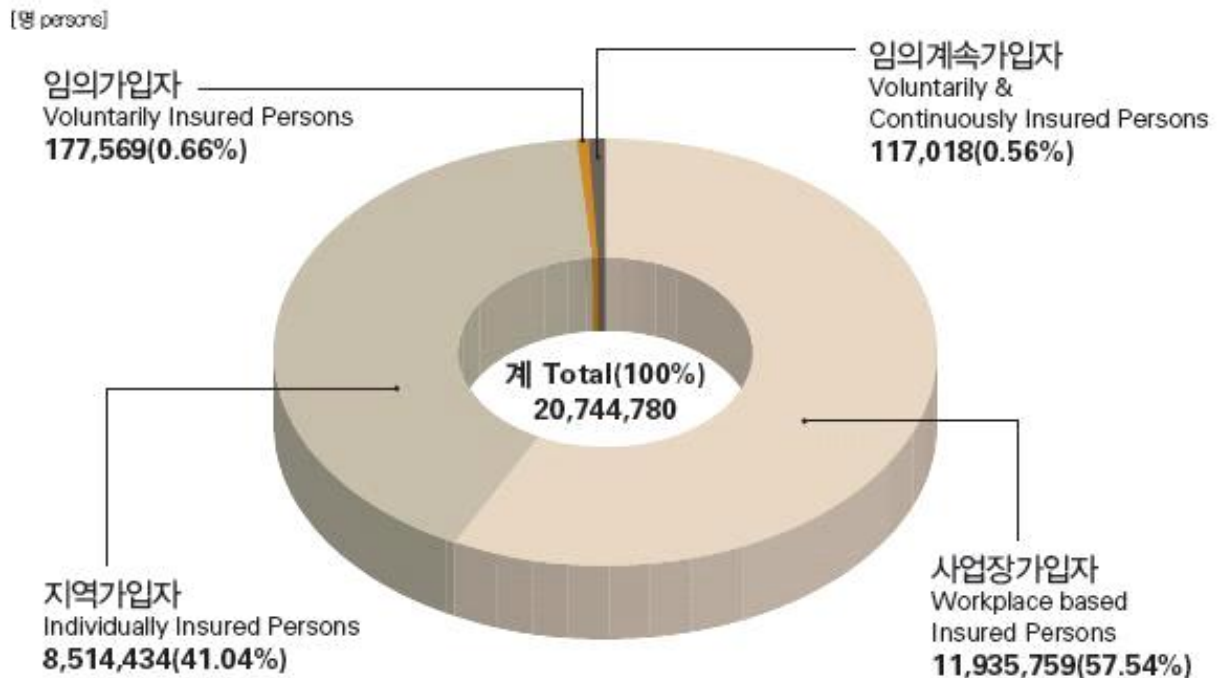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가입자 현황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2013년 가입자 현황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전체의 57.54%, 지역 가입자는 41.04%로 나타났다.

[그림 3] 2013년도 가입자 현황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연령별 비교에서 40대 미만의 가입률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20년 이상 장기가입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나타난다.

[표3] 연도별, 가입자종별,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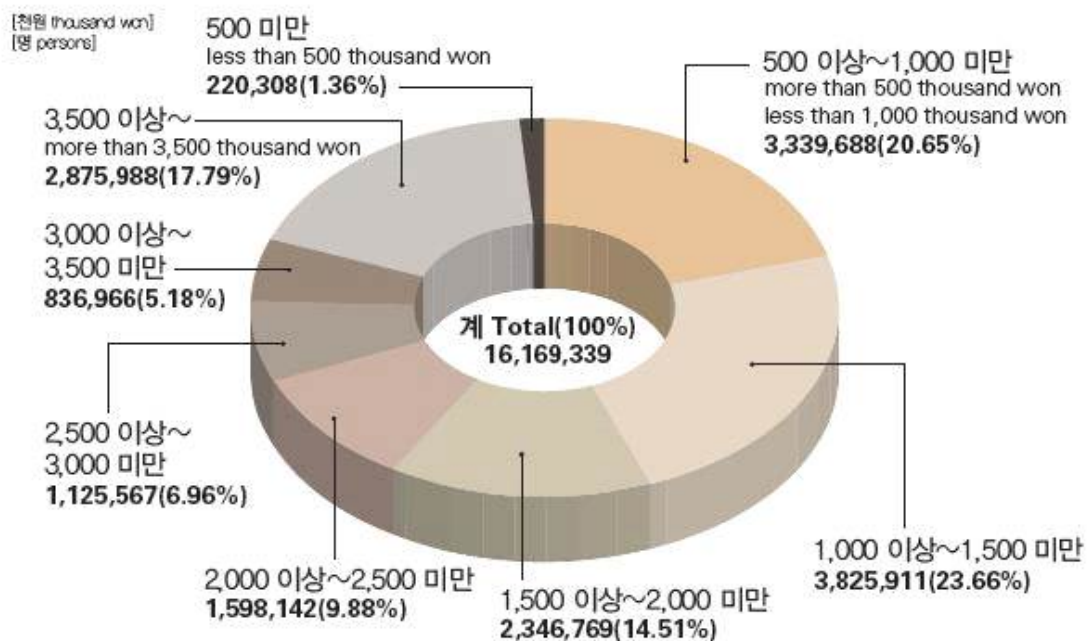
구 분		합계	10대~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9	합계	18,624	3,675	5,493	5,445	3,970	41
	사업장	9,867	2,269	3,309	2,779	1,509	-
	지역	8,680	1,405	2,182	2,657	2,435	0
	임의	36	0	2	9	25	-
	임계	41	-	-	-	-	41
2010	합계	19,229	3,621	5,570	5,606	4,382	49
	사업장	10,415	2,270	3,447	2,973	1,726	-
	지역	8,674	1,350	2,113	2,604	2,607	0
	임의	90	2	10	29	50	-
	임계	49	-	-	-	-	49

2011	합계	19,886	3,568	5,643	5,802	4,811	63
	사업장	10,977	2,292	3,566	3,167	1,951	-
	지역	8,675	1,271	2,056	2,577	2,771	0
	임의	171	4	21	57	89	-
	임계	63	-	-	-	-	63
2012	합계	20,329	3,515	5,685	5,949	5,092	89
	사업장	11,464	2,277	3,668	3,356	2,164	-
	지역	8,568	1,233	1,992	2,524	2,819	0
	임의	208	5	25	69	109	-
	임계	89	-	-	-	-	89
2013	합계	20,745	3,487	5,658	6,093	5,390	117
	사업장	11,936	2,263	3,729	3,561	2,383	-
	지역	8,514	1,221	1,910	2,477	2,906	0
	임의	178	4	18	55	100	-
	임계	117	-	-	-	-	117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 2013년 말 현재 50만원 단위 소득월액별 가입구성비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2013년 기준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1,935,977원 미만인 가입자가 전체 60.18%로 나타났다.

[그림 4] 2013년 소득월액별 가입자 구성비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2) 연금보험료 총괄 징수현황

- 국민연금은 적립식 기금으로 제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급자보다 보험료 납부자가 더 많은 구조이다. 누적 징수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연금보험료 총괄 징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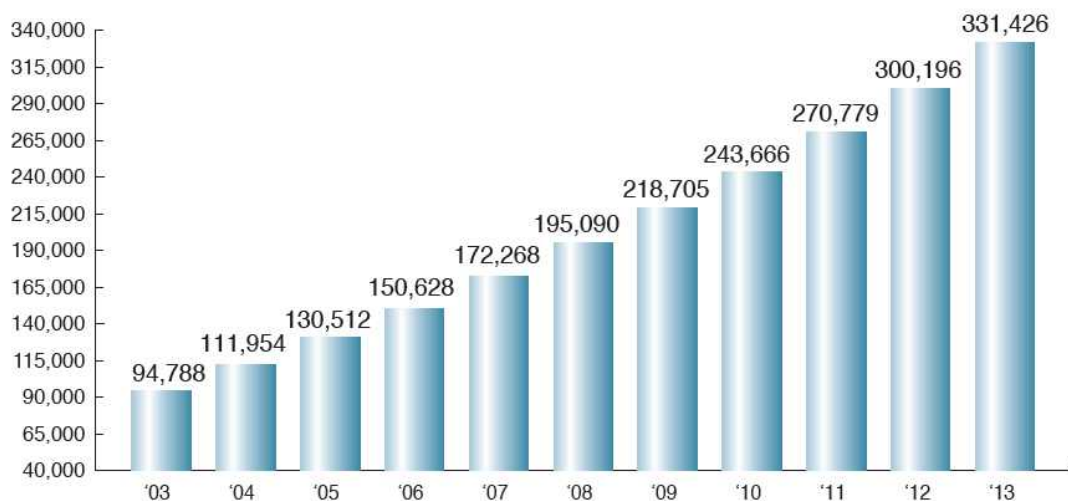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지역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고 지	당월	5,469,733	1,272,708	3,981,803	2,871,254	1,110,549	215,222
	누계	820,402,013	138,632,199	663,244,910	436,007,298	227,237,612	18,524,904
징 수	당월	3,652,601	1,044,190	2,393,189	1,692,550	700,639	215,222
	(%)	(66.8)	(82.0)	(60.1)	(58.9)	(63.1)	(100.0)
	누계	772,769,506	135,697,037	618,547,565	403,038,554	215,509,011	18,524,904
	(%)	(94.2)	(97.9)	(93.3)	(92.4)	(94.8)	(100.0)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014년5월말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그림 5] 연도별 누적 징수액 현황

[천명 thousand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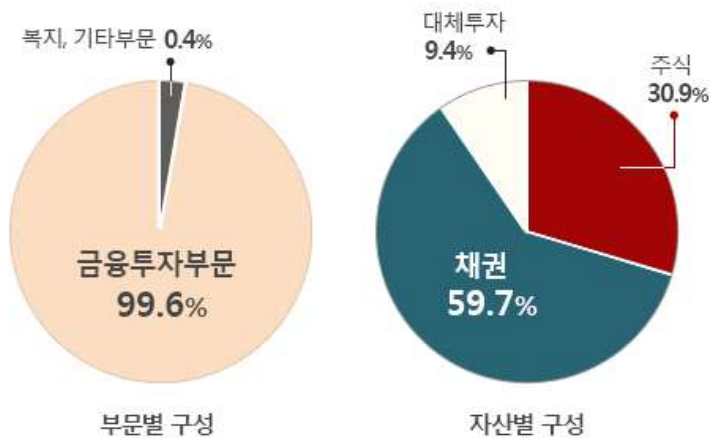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3)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

-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하여 국내채권의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6]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 조원, 2014.6월말 기준)

구분	금액	비중
전체자산	446.5	100%
복지부문	0.1	0.0%
금융투자부문	444.7	99.6%
국내주식	86.9	19.5%
해외주식	50.4	11.3%
국내채권	245.6	55.0%
해외채권	18.9	4.2%
대체투자	42.0	9.4%
단기자금	0.8	0.2%
기타부문	1.6	0.4%

* 기타부문은 회관비, 임차보증금 등임

[자료제공: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 수익률 추이를 보면 그동안 양호한 운용 성과를 보였으나 수익률 수준은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으로 인하여 저하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는 세계 경제 시장과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경제 여건도 중요하지만 다변화되는 세계 경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림 7] 전체 운용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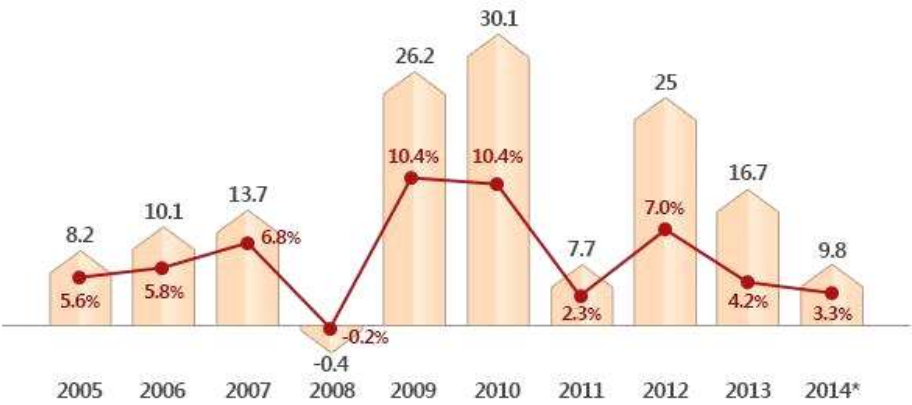
(단위: 조원, 2014. 6월말 기준)

199.3 조원

1988년 ~ 2014년 현재
누적 수익금

6.0 %

1988년 ~ 2014년 현재
연평균 누적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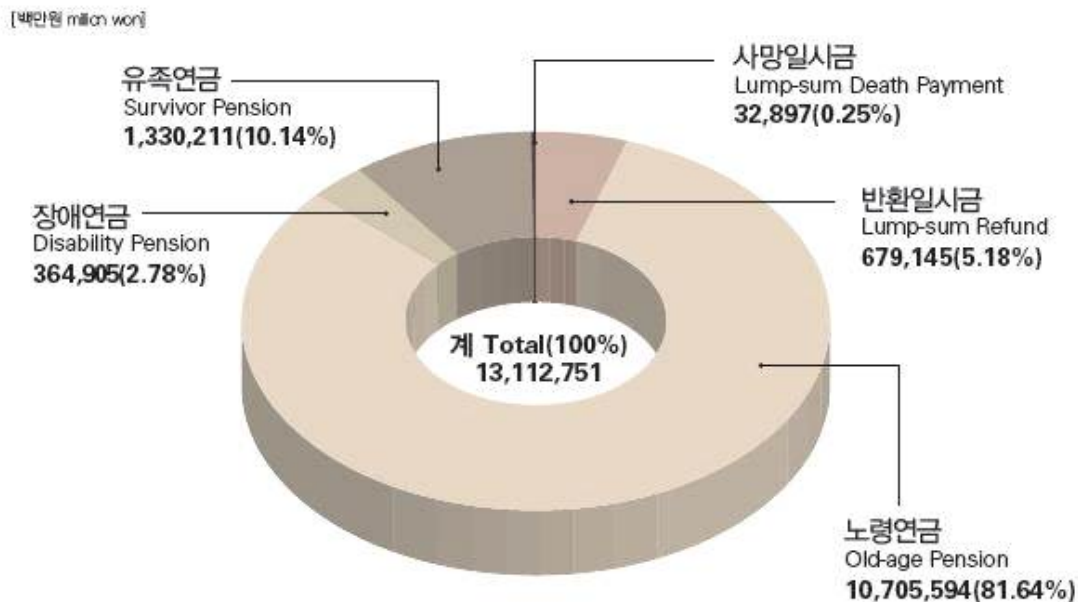
[자료제공: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IV. 국민연금 지급현황 및 기금 재정 추이

1. 국민연금 지급현황

- 연금수급자는 2000년 61만 8천명 에서 2013년 천 311만 2천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13년 한 해 363만 명의 수급자에게 13조 1,113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2000년 1조 6천억 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8] 2013년도 급여지급액 현황



[자료제공: 국민연금, 2013 국민연금 통계연보]

- 전국 16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67만 명)이 2조 7천억 원으로 제일 높았고, 경기도(69만 명)가 2조 6천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2014년에는 수급자와 연금지급액 모두 각각 19만 명, 1조 4,701억 원이 늘어나 총 382명 수급자에게 월 1조 2,151억 원씩 총 14조 5,814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년 전(2009년 277만 명에게 7조 4,719억 원 지급)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향후 2025년에는 수급자가 62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급여종별 연금 지급현황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급여종별 지급현황은 2014년 5월 기준 연금 수급자는 346만 여명이며, 수급 금액은 5조 3천억 원에 해당한다. 한편 일시금 수급자는 7만 여명이며, 수급 금액은 2천9백5십억 원에 해당한다.

[표 5] 급여종별 지급현황

(해당년도 누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계	연 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2014 5월	수급자	3,537,383	3,466,865	2,857,514	72,085	537,266	70,518	1,056	64,671	4,791
	금액	5,628,833	5,333,157	4,603,773	137,338	592,046	295,676	13,850	266,184	15,642
2013	수급자	3,633,770	3,440,693	2,840,660	75,041	524,992	193,077	2,993	179,440	10,644
	금액	13,112,752	12,361,973	10,705,594	326,168	1,330,211	750,779	38,737	679,145	32,897
2012	수급자	3,499,522	3,310,211	2,748,455	75,934	485,822	189,311	2,862	175,716	10,733
	금액	11,550,754	10,837,244	9,327,087	314,463	1,195,694	713,510	34,654	648,045	30,811
2011	수급자	3,166,983	3,015,244	2,489,614	75,895	449,735	151,739	3,480	136,628	11,631
	금액	9,819,296	9,273,039	7,905,180	305,547	1,062,312	546,257	41,919	475,051	29,287
2010	수급자	2,975,336	2,820,649	2,330,128	76,280	414,241	154,687	3,447	141,347	9,893
	금액	8,635,467	8,107,420	6,861,876	296,305	949,239	528,047	37,299	465,123	25,625
2009	수급자	2,770,344	2,602,630	2,149,168	74,535	378,927	167,714	3,836	154,119	9,759
	금액	7,471,934	6,946,490	5,814,825	287,016	844,649	525,444	40,940	460,476	24,028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 성별 연금 지급현황

- 성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은 2014년 5월 기준으로 남성 연금 수급자는 2백만 여명, 여성은 1백3십만 여명으로 남성 59.8%, 여성 40.2%의 비율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급 금액에서는 남성이 3조 7천억 원 (71.2%), 여성이 1조 5천억 원(28.8%)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시금 수급자와 수급 금액은 남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 수급자가 중도에 탈퇴하여 일시금을 수령하는 수가 남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성별 연금 지급현황

(해당년도 누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계	연 금			일시금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014 5월	수급자	3,537,383	3,466,865	2,072,690	1,394,175	70,518	33,946	36,572
	금액	5,628,833	5,333,157	3,797,215	1,535,941	295,676	171,275	124,401
2013	수급자	3,633,770	3,440,693	2,068,793	1,371,900	193,077	96,230	96,847
	금액	13,112,752	12,361,973	8,837,955	3,524,018	750,779	452,225	298,554
2012	수급자	3,499,522	3,310,211	2,009,776	1,300,435	189,311	100,640	88,671
	금액	11,550,754	10,837,243	7,724,739	3,112,504	713,510	450,245	263,265
2011	수급자	3,166,983	3,015,244	1,823,340	1,191,904	151,739	78,281	73,458
	금액	9,819,296	9,273,039	6,566,551	2,706,488	546,257	339,323	206,934
2010	수급자	2,975,336	2,820,649	1,709,015	1,111,634	154,687	77,720	76,967
	금액	8,635,467	8,107,420	5,715,440	2,391,980	528,047	322,247	205,800
2009	수급자	2,770,344	2,602,630	1,576,960	1,025,670	167,714	97,686	70,028
	금액	7,471,934	6,946,490	4,853,497	2,092,993	525,444	348,382	177,062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3) 연령별 연금 지급현황

- 연령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자와 수급 금액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62%를 차지하면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타연금 보다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령별 연금 지급현황

(해당년도 누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69세	70세이상
2014 5월	수급자	3,466,865	11,746	1,063	12,522	60,662	276,633	966,693	1,027,630	1,109,916
	금액	5,333,157	14,115	1,522	18,041	88,530	490,975	1,984,488	1,574,051	1,161,435
2013	수급자	3,440,693	12,407	1,172	13,366	62,381	287,504	1,002,574	1,010,459	1,050,830
	금액	12,361,973	32,990	3,459	43,755	207,619	1,168,937	4,808,189	3,538,128	2,558,896
2012	수급자	3,310,211	11,315	1,234	14,556	63,526	309,053	1,080,330	929,035	901,162
	금액	10,837,244	28,787	3,485	45,634	204,186	1,081,463	4,428,213	2,957,258	2,088,218
2011	수급자	3,015,244	11,317	1,365	15,692	66,221	260,671	1,059,012	882,871	718,095
	금액	9,273,039	27,344	3,746	47,972	203,452	932,683	3,994,360	2,506,190	1,557,292
2010	수급자	2,820,649	11,218	1,543	17,000	69,369	244,306	1,053,528	849,248	574,437
	금액	8,107,420	26,491	4,082	50,609	204,373	829,518	3,614,074	2,203,085	1,175,188
2009	수급자	2,602,630	10,957	1,599	18,015	71,970	225,123	1,010,343	813,217	451,406
	금액	6,946,490	24,808	4,267	52,213	207,235	727,470	3,104,251	1,950,995	875,251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4) 지역별 연금 지급현황

- 지역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8.7%, 서울 18.3%, 부산 8.2% 등의 순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여 큰 특이점은 없었다.

[표 8] 지역별 연금 지급현황

(해당년도 누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4. 5월	수급자	3,466,865	633,163	283,477	172,578	160,047	85,320	82,688	67,467	9,407
	금액	5,333,157	1,091,295	458,980	258,248	259,906	125,494	133,162	138,967	13,252
2013	수급자	3,440,693	633,163	283,477	172,578	160,047	85,320	82,688	67,467	9,407
	금액	12,361,973	1,091,295	458,980	258,248	259,906	125,494	133,162	138,967	13,252
2012	수급자	3,310,211	629,116	281,396	171,238	157,889	84,743	81,964	66,632	9,163
	금액	10,837,244	2,538,735	1,067,292	600,733	599,631	290,962	308,464	318,314	30,124
2011	수급자	3,015,244	609,809	271,794	164,054	150,460	81,445	78,358	63,566	8,628
	금액	9,273,039	2,236,844	939,642	526,209	519,964	257,409	267,896	274,546	25,988
2010	수급자	2,820,649	555,562	245,145	148,734	133,980	74,647	70,347	56,674	-
	금액	8,107,420	1,924,780	801,348	449,206	438,955	221,219	225,788	228,560	-
2009	수급자	2,602,630	522,275	227,745	137,875	123,382	69,284	65,101	51,877	-
	금액	6,946,490	1,692,843	698,844	391,726	379,442	191,397	195,073	193,098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5월	수급자	649,680	119,603	114,658	158,648	166,038	202,115	264,407	253,240	44,329
	금액	1,065,806	168,401	162,786	206,722	207,968	242,100	365,293	373,255	61,522
2013	수급자	649,680	119,603	114,658	158,648	166,038	202,115	264,407	253,240	44,329
	금액	1,065,806	168,401	162,786	206,722	207,968	242,100	365,293	373,255	61,522
2012	수급자	642,213	118,916	113,782	157,515	165,514	202,193	263,060	251,315	44,044
	금액	2,460,899	390,187	377,861	479,085	484,389	563,671	846,540	862,106	142,980
2011	수급자	611,240	114,400	108,558	152,018	160,591	197,569	253,432	241,729	42,560
	금액	2,127,009	341,588	327,079	423,069	433,264	508,870	746,652	754,340	126,875
2010	수급자	546,569	104,354	99,366	147,222	150,052	186,892	235,434	220,839	39,427
	금액	1,797,758	292,183	280,536	384,419	377,989	449,087	647,165	643,199	110,847
2009	수급자	506,121	98,626	92,969	138,744	141,763	178,780	222,417	206,367	37,323
	금액	1,557,833	258,462	245,141	337,360	332,884	402,061	572,476	560,604	98,176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이

1)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 국민연금은 제도 초기에 필요한 지출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소가입기간이 존재하며,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현재 상당한 기금적립이 되었으나(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 3차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2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 재정안정화 대책 제1안의 기본방향은 현행 재정방식(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전제 하에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를 기준(2083년)으로 최소한 적립배율 2배 이상 유지’를 재정안정화 목표로 설정
- 재정안정화 대책 제2안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부과방식에서의 연착륙(soft landing)’으로 재설정하고 대안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함
- 기존 재정목표는 보험료율의 지속적 인상을 전제로 하며, 기금 과다적립·기금의 급격한 감소문제를 간과하는 등의 문제 내포하므로
- 이에 기본적으로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포괄적인 대책을 집중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2) 재정목표

-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안정의 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바 복수의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함으로써,
-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과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금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목표이다.

〈기금적립 목표에 대한 기준〉

- **적립배율 2배** : 추계기간 말에 적립배율 2배의 기금을 보유한다는 목표로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성격의 적립기금 보유를 목표로 함
 ※ 적립배율은 익년도 총지출에 대비한 연말 적립기금의 비율임
- **적립배율 5배** : 추계기간 말에 적립배율 5배의 기금을 보유한다는 목표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기금 보유를 목표로 함
- **수지적자 미발생** : 추계기간 말까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이 경우 추계기간동안 적립기금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상태에 있으므로 적립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연금 지불이 가능한 규모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 장기적인 적립배율의 추이가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 (steady-state)한다는 목표로서, 이 경우 추계기간 이후에도 추계기간 이전과 유사한 재정 상태를 보이게 됨
- **완전적립** : 추계기간 말 이후에 신규가입자의 유입이 없다는 가정 하에 현재이후부터 추계기간말까지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제도를 운영하되, 외부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자금유입이 없이도 수지 균형을 유지한다는 목표

①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1차 재정계산(2003)

[표 9] 1차 재정계산

재정목표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가정					수지적자발생연도 및 기금소진연도
	2010 ~ 2014	2015 ~ 2019	2020 ~ 2024	2025 ~ 2029	2030 이후	
목표적립률 2배	11.17%	13.34%	15.51%	17.68%	19.85%	수지적자 : 2055
목표적립률 5배	11.47%	13.94%	16.41%	18.88%	21.35%	수지적자 : 2060
수지적자 미발생	11.89%	14.78%	17.67%	20.56%	23.45%	-
완전적립	24.98%					-

※ 1차 재정계산의 추계기간은 2070년까지임

○ 1차 재정계산에서는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완전적립’을 재정목표로, 2·3차 재정계산에서는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재정목표로 적용하여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계하였다.

- 1차 재정계산에서는 적립기금에 대한 목표를 기준으로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정하되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5차례에 걸쳐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인상폭은 동일한 것으로 함
- 2·3차 재정계산에서는 추계시작년도에서 추계기간 말 사이에 고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②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2차 재정계산(2008)

- 2차 재정계산에서는 합계출산율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합계출산율에 대한 기본가정과 대안가정을 설정하였으며, 기본가정 및 대안가정 각각에 대해서 4가지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계하였다.

[표 10] 2차 재정계산

구분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 적립배율 유지
기본가정	12.49%	13.17%	14.31%	17.50%
대안가정	11.05%	11.63%	12.21%	14.45%

※ 2차 재정계산의 추계기간은 2075년까지임

③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3차 재정계산(2013)

[표 11] 3차 재정계산

구분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 적립배율 유지
필요 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 2013년 실시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20~30년간은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 경제 상황 변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전 수준 ('88~12년 평균 6.69%)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표 12] 국민연금 재정 추이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2013년	2020년	2040년	2060년
가입자 수	20,396	20,367	16,823	13,573
노령연금 수급자 수	2,656	3,881	9,743	14,475
보험료 수입	32,135	54,073	141,595	263,375
연금급여 지출	14,032	33,487	212,563	655,155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 + 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3년에 최고 2,561조원(2010년 불변가 기준 1,084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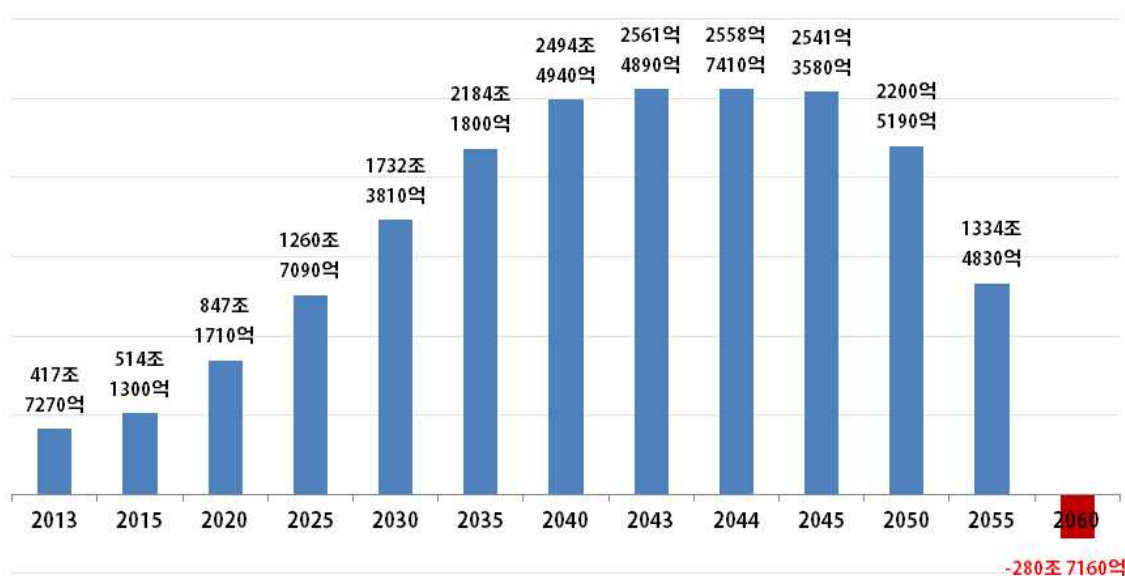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 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5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3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6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47,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그림 9]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재가공]

○ 이상의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할 때, 향후 국민연금은 거대기금의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GDP의 31.1%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 비율이 2035년에는 49.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내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기금규모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정도이다.

○ 이렇듯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 및 외부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기금 소진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측면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제도 개혁: 2차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통해 적립금 보유기간 13년(2047→2060년)연장
- 기금 운용: 연평균 수익률은 6.69%('88~' 12년)로, 지난 10년간 해외연기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하에 높은 수익의 운용성과 기록

[표 14] 2002년~2011년 주요국가 연기금 수익률 및 위험 비교

'02 ~ '11 평균	국민연금	GPIF(일)	ABP(네)	CalPERS(미)	CPPIB(캐)
수익률(%)	6.6	1.9	5.2	5.1	6.2
위험(표준편차)	3.5	7.3	11.8	14.8	11.0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V. 국민연금운용의 문제점

1. 연금 구조적 문제

1) 구조적, 재정적 불균형

-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 설계시부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낮은 기여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약속함으로써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 현상은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세대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등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2)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사실상 불가

- 소득파악 미비로 사업장 가입자와 소득은폐의 여지가 매우 높은 지역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30%만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고 70%는 아무런 객관적 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3) 전문성 부족, 독립성 미확보

-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다. 공적 연금의 특성상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을 대변한다는 순기능도 있으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역기능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안전을 사전에 심의하고 기금 운용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0] 기금운용위원회·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일선직위원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보건복지부차관(위원장),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소속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의사결정위원	사용자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 각 1인	
	근로자 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추천 각 1인	
	지역가입자대표	농업현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추천 각 1인	
	관계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은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1년에 4~6회에 불과하여 위원들이 해당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위촉위원의 경우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고 있어 독립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로는 최고 심의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독립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연금 운용 본부를 이끄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구조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실제로 기금운용 본부장의 역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성향에 따라 변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장 위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 기금 규모가 세계 4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역의 인력 및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423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200여명의 기금운용역이 꾸리는데 1인당 운용규모로 환산하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는 1인당 운용 기금이 1조원 이하인 선진국 연기금 뿐 아니라 국내 연기금 투자기관인 공무원연금(2,000억원), 사학연금(4,000억원), 한국투자공사(5,000억원·KIC)와 비교해도 부담스러운 규모이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연봉은 8,275원으로 민간 금융사 직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업무 부담은 크고 연봉은 부족한 지금의 보상 체계로는 2016년으로 예정된 공사의 전주 이전 시 우수 인력 누수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례〉

- 해외 연기금 역시 비전문가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비전문가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의 경우 매년 운용역과 위원 등 100명을 토론토대학의 기금관리국제센터(ICPM)와 뉴욕 맨해튼에 파견해 교육시키고 있으며 위원들 간 상호 평가를 통해 자격 미달인 위원들을 걸러내기도 한다.
- 위원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도 눈에 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B)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최소 3~5년 보장하며 임기 기간 동안 위원들은 별도의 직업 없이 CPPIB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구조 덕에 CPPIB의 비전문가 위원들도 본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며 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며칠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 2년의 임기조차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도 있으며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1년에 많아야 6회 열리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구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4) 국민연금 사각지대

-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할 정도로 낮은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를 말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2년 기준 1,990만명(경제활동인구 2,222만 명 대비 약 89.6%)에 달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대비 소득신고자의 비율인 실 가입률은 약 68.5%(1,524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가입률은 68.5%, 국민연금 적용 대상 대비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한 실가입률은 43.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 대상의 제1차 사회안전망임에도,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비율은 적용 대상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 실 가입률 64%는 유사 보험제도를 가진 외국 국가 평균 83.6%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15]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2.12)

18~59세 총인구 32,848천명 (100%)					
비경제 활동인구 10,626천명	경제활동인구 22,222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831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1,391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1천명			특수직역연금 1,490천명
		납부예외자 4,665천명	소득신고자 15,236천명		
			장기체납자 1,061천명	보험료 납부자 14,175천명	
32.4%	2.5%	14.2%	3.2%	43.2%	4.5%
적용사각지대 17,183천명 (52.3%)				보험료 납부자 15,665천명 (47.7%)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표 16] 국민연금 실질 가입률 국제비교

(천명, %)

구분	가입대상	가입자규모 (A)	민간부문 경활인구(B)	20-64세 인구(C)	실가입률 I A/B	실가입률 II A/C
미국 (OASDI)	전소득활동 인구	162,310 ('08)	153,124 ('07, 16세)	184,016 ('09)	106.0	88.2
독일 (공적연금)	16-65세 피용자	34,988 ('07)	41,416 ('07, 15세)	49,899 ('09)	84.5	70.1
영국 (기초연금)	16-65세 소득활동인구	33,400 ('07~8)	30,790 ('07, 16세)	37,153 ('09)	108.5	90.0
캐나다 (CPP+QPP)	18-70세 소득활동인구	16,256 ('07)	17,696 ('07, 16세)	20,771 ('09)	91.9	78.3
일본	기초 20-60세 전인구	70,380 ('08.3)	66,080 ('07, 15세)	75,328 ('09)	106.5	93.1
	후생 65세 미만 피용자	33,7990 ('08.3)			51.1	44.7
한국 (국민연금)	18-60세 소득활동인구	14,403 ('11.12)	23,500 ('11.12, 18세)	32,793 ('11.12)	64.9	43.9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 이러한 낮은 실질가입률의 요인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2012년 기준 국민연금 총 가입자 2,024만 명 중 지역가입자는 857만 명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미납부 이유는 대개 경제적 여력의 문제로 추측된다. 지역가입자의 50% 이상이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나머지는 자영자집단으로 이 중의 50%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불완전자영자이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저소득 계층으로 볼 수 있다.
- 낮은 연금수급률 또한 문제가 된다. 제도의 미성숙과 가입사각지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수급자의 규모는 노인인구 대비 소규모이다. 2010년 말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600만 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160만 명으로 약 26% 수준이다. 특수직역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와 합쳐도 수급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급여의 적정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초

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2년 국민연금통계 연보 통계표에 따른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은 평균 4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25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약 12%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을 합친 결과 소득대체율은 평균 20%로 높아지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아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적용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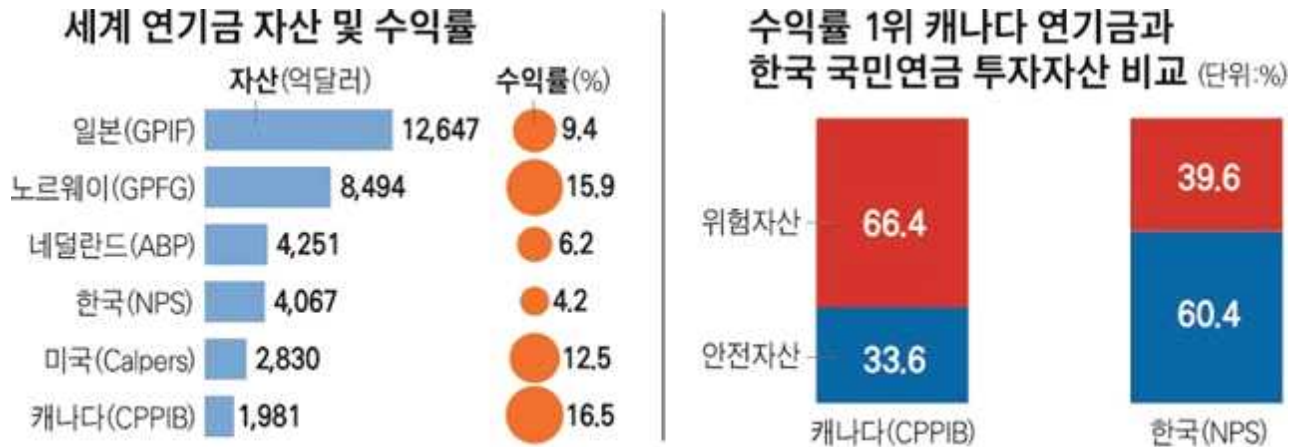
2. 기금 운용상의 문제

1) 소극적, 보수적 기금 운용

-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처럼 채권이나 선진국 투자 등 안전위주로만 운용해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 수익률 올리기에 힘쓰고 있다. 2014년 7월 13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세계 상위 300개 연기금 중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 연기금이었다. 자산 규모(1,981억달러)는 우리나라 국민연금(4,067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나, 수익률은 16.5%로 우리나라의 4.2%의 약 4배에 달한다. 자산 규모 2위인 노르웨이가 15.9%로 뒤를 이었고, 미국도 12.5%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1조2,647억달러) 역시 수익률이 9.5%였다.
- 반면 국민연금은 운용 규모로는 세계 4위이지만 2013년 수익률은 4.2%로 주요 연기금 수익률은커녕 자체 목표치인 6.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 상위 5개국 평균에 비하면 6% 이상 뒤처지는 수치이다.

[그림 11] 세계 연기금과 국민연금 비교



세계 연기금은 2013.4~2014.3, 국민연금(NPS)은 2013년 한해 기준. 자료: 블룸버그, KDB대우증권, 국민연금공단

-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채권 중심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전략과 운용 능력을 꼽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4%에 달한다.
- 수익률 1위인 캐나다의 경우 2000년 채권 비중이 95%에 달할 정도로 보수적 운용을 해왔으나 2005년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있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40.2%로 가장 높으며 채권(33.6%), 부동산 및 인프라(17.7%), 국내 주식(8.5%) 순으로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위험자산(66%)이 안전자산(44%)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운용기관의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결정이다.
- 국민연금의 지난해 투자 성과 중에서도 해외주식(21.61%)과 대체투자(6.44%)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2015년말 자산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2.9%, 해외주식 11.6%,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이다.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택한

선택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금 운용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투자 내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만큼 적어도 원금 손실은 피해야 한다며 과감한 투자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투자 형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 기금 운용의 도덕성 문제: 일본 전범기업 투자

- 「일본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및 그 외의 나라에 침략을 위해 군수와 관련한 군복, 무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전범기업」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위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중국인 등 외국인의 노동력을 무작위·무보수로 착취하여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지난 2011년부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조사하여 1차(136개 ‘11.9.16), 2차(58개 ‘12.2.29), 3차(105개 ‘12.8.29)로 나누어 위와 같은 「일본전범기업」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총 299개 「일본전범기업」명단이 확정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일본전범기업」 투자 현황(2014.6월 기준)에 따르면, 일본 투자 기업 779개 중 「일본전범기업」은 79개이며 이는 일본 투자 기업의 10.1%에 해당한다. 전체 해외투자 기업 4,613개 중에서는 「일본전범기업」은 1.7%를 차지한다. 투자 금액을 보면, 일본기업 투자금액 3조7,694억 원 중 「일본전범기업」 투자금액은 5,027억 원으로 일본기업 전체투자 금액의 13.3%에 해당하며 전체 해외기업 투자금액 50조3,335억 원 중 「일본전범기업」은 1%를 차지한다.

[표 17] 국민연금공단 일본전범기업 투자 현황

(2014.6월 현재)

구분	전체 해외투자 기업	일본 투자 기업	일본전범기업
개수	4,613 (100%)	779 (16.9%)	79 (1.71%)
금액(억원)	503,335 (100%)	37,694 (7.49%)	5,027 (1%)

-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기업 확대와 투자금액의 증가라는 것에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는 2011년 52개, 2012년 40개, 2013년 47개, 2014년 6월 현재 79개 기업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투자금액 또한 2011년 1,801억 원, 2012년 3,037억 원, 2013년 4,355억 원, 2014.6월 현재 5,027억 원으로 증가추세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투자기업 확대 및 투자금액의 지속 증가에 비해 투자대비 수익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표 18] 국민연금공단 일본전범기업 투자금액 및 수익률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6	계
투자금액(억원)	1,801	3,037	4,355	5,027	1조4,256억
투자기업수(개)	52	40	47	79	-
평가손익(억원)	-148	-32	298	496	614

- 더 큰 문제는 공단이 해외투자 ‘투자선정기준 및 투자방식’에 대한 전략적·차별적 정책과 업무추진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주식은 직접운용(20%)·간접운용(80%)으로 운용되며, 직접운용의 경우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인덱스펀드 위주로 운용 하고 있다. 위탁운용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가치와 주식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선발·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이 단기적 이익창출에 사로잡혀, 장기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일본전범기업」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과 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 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소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며 주요 상장 기업의 주식은 다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12] 국민연금이 1조원 이상 보유한 주요 기업

국민연금이 1조원 이상 보유한 주요 기업 단위: %, 원			
		보유 지분	보유 금액
1	삼성전자	7.43	14조6048억
2	현대차	6.99	3조5896억
3	SK하이닉스	9.41	2조5842억
4	현대모비스	7.17	2조1858억
5	NHN	8.18	1조9818억
6	포스코	7.54	1조9043억
7	신한지주	8.81	1조8913억
8	기아차	7.04	1조5384억
9	KB금융지주	9.96	1조5083억
10	LG화학	8.71	1조4826억
11	삼성물산	13.03	1조2682억
12	하나금융지주	9.95	1조1853억
13	SK이노베이션	8.59	1조767억
14	SK텔레콤	6.10	1조597억
15	현대중공업	6.09	1조386억
*2014년 2월 25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그러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위원 대부분이 정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있는 현 지배구조 상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기금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가장 주된 목표는 기업 가치를 높여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올바른 경영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사 등 핵심 경영자를 제대로 선임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상장 기업이 218곳이나 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하여 부적격 이사의 선임을 반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의 핵심이란 평가를 받았던 횡령·배임 기업인과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 등의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은 보류되었다.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대부분은 재계의 반대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정책이 발표되어도 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실정이다. 덩치만 큰 종이호랑이 주주인 셈이다.
-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대규모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운용 수익을 극대화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의결권 행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해외 사례〉

□ 미국 캘퍼스(CalPERS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연기금.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 목록을 매년 공표하고 반대의결권 등을 행사한다. 캘퍼스가 투자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뜻의 ‘캘퍼스 효과’라는 표현도 있다.
- 캘퍼스는 분명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례지만, 두 연기금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캘퍼스는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연기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과는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국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차이가 난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캘퍼스의 비중은 0.3%로 6.4%인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강화에 나설 수 있다.

[그림 13] 전 세계 주요 연기금의 위상 및 주주권 행사 내용 비교

전 세계 주요 연기금의 위상 및 주주권 행사 내용 비교						
구분		캘퍼스(미국)	CPPIB(캐나다)	국민연금(한국)	GPIF(일본)	SuperAnnuation(호주)
자국 주식시장 내 비중		약 0.3%	약 1%	약 6.4%	약 5%	약 20%
연금 수혜자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미국 내 사립대 임직원	전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소극적 주주권	의결권 행사	○	○	○	○	○
	비통일적 행사	×	×	△	○	○
능동적 주주권	주주 관여	○	○	×	×	펀드매니저에 따라 다름
	중점 감시 목록	○	×	×	×	
	주주 제안	○	○	×	×	
	사외이사 추천	×	○	×	×	
	투자자 연대	○	○	×	×	
	주주 소송	○	○	×	×	
	입법 운동	○	○	×	×	

자료 |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한국경제연구원 등

□ 일본 공적연금기금(GPIF)

-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이다.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이 5% 내외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외부 자산 운용사에 위임한다. 장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 때문에 나온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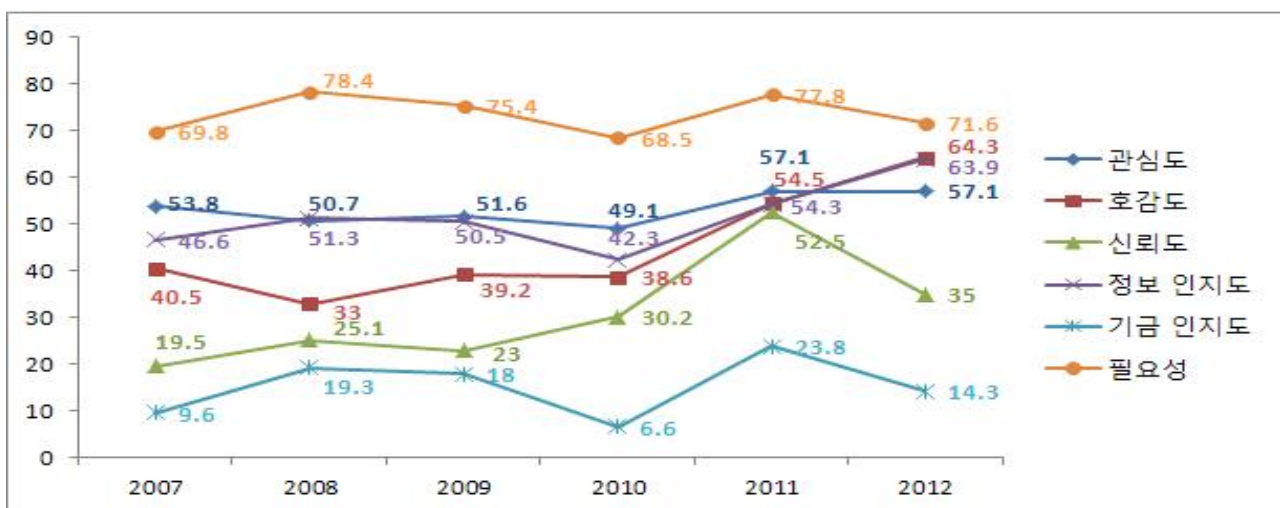
□ 호주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 호주를 대표하는 연기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놓은 형태이다. 호주 주식시장 전체의 20% 이상을 보유하여 국민연금의 3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은 외부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형태이다. 보통 연기금은 복수의 외부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므로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 연기금 의결권이 분산돼 비통일적으로 행사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 상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4)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신뢰도·호감도 등 제반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신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70.4%)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잦은 제도 변경(24.2%), 강제가입제도(19.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9] 연도별 국민연금 인식 및 태도 변화 추이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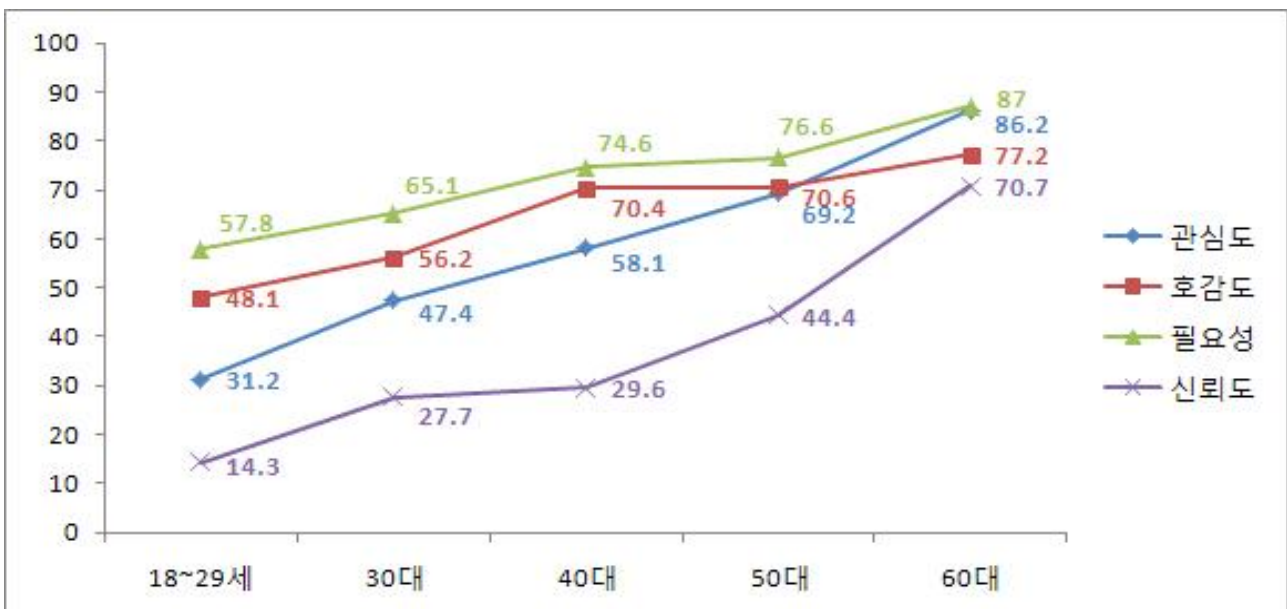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하여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세대의 높은 불신도는 장기 가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가입자 현황에서 살펴본 40대 미만 가입률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이러한 깊은 불신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규모 이탈이나 가입 거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림 20] 연령별 국민연금 인식 및 태도 변화 추이 (2012)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기간산정)에 따른 문제

1) 기초연금 개요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였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제도이다. 지급대상 노인에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의 합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설계하여,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는 50만원의 부족분을 지급한다.
- 기초연금지급액은 1차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하며,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재조정한다.

[표 19] 선정기준액 (2014. 7.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870,000원	1,392,000원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2)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2014년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20만 명이며, 이는 7월 수급자보다 1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 수급자는 388만 명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하며, 단독·부부1인 가구(20만원) 수급자는 238만 명, 부부2인 가구(32만원) 수급자는 1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부가구와 단독 가구의 지급액 차이는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20% 차감하여 지급한 것임

- 이 외에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일부 감액되는 사람이 32만명 (7.6%)으로 나타남

[표 20] 기초연금 수급자 세부현황

수급자 유형	기초연금 급여액		
	20(16)만원	10(8)~20(18)	2~10(8)
무연금자[2,902천명, 70.5%]	2,863천명(96.6%)	70천명(2.4%)	29천명(1.0%)
국민연금 수급권자 [1,242천명, 29.5%]	1,021천명(82.2%)	187천명(15.1%)	34천명(2.7%)
합계[4,204천명]	3,884천명(92.4%)	257천명(6.1%)	63천명(1.5%)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는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포함
- 국민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포함

○ 또한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 사람은 26만 6천 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결정된 11만 5천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전체 수급자는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람은 15만 1천 명으로 예상된다.

3) 기초연금 재원

-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조세로 조달되며 국민연금 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기초연금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기초연금의 국비부담비율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4) 기초연금 지급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제도이다. 재원은 물론 국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지만, 기초연금 산정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연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기초연금은 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며 따라서 현재의 재정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이 형성되는 사회보험이다. 이렇듯 지급 대상도 다르며 재원도 다른 두 제도의 연계는 향후 노후보장 체계 설립 및 개혁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저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할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차감되어 소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 중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국민연금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만 채운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하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입자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이 미흡해지고, 국민연금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만 피해) 기초연금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 향후 전망 :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문제

-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소득, 연령,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며,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익이 더 커진다고 한다.

- 하지만, 기초연금 삭감 또는 연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우려에 임의가입자 중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고, 상대적으로 청장년층들은 본인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정부 대신 노인부양을 위해 사용하고 미래 본인들의 노후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다는 불안감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결국은 이 모든 불안감과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연금법」에 제4조2항에 의하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청장년층의 노인부양을 위한 기금 소진 때문도 아니다.
-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과 기초연금과의 연계에 따른 수급자들의 불만은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정부의 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 전체에 만연한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가 그 해결책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VI. 외국의 연금운용제도

1. 일본

- 민간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1939년의 「선원보험법」으로 시작되었고, 1941년에는 남성공장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연금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44년에는 피용자 중에서 남성 화이트칼라와 여성에게도 적용이 확대된 「후생연금보험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개정되었다.
- 1959년에는 기존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5년에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 적용을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 일본의 다층소득보장체계는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0층은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임
 - 1층은 피용자를 위한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위치함
 - 2층에는 기업연금 및 공무원을 위한 직역가산 연금이 위치함
 - 3층에는 개인저축이 위치함

[표 21] 일본의 다층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저축							
2층				후생 연금 기금	확정 급여	적격 퇴직 연금	확정 기여 연금	
								직역가산부분
1층		국민 연금 기금	확정 기여 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	
0층								

대상 자	제3호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제2호피보험자
---------	----------	-------------	---------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해외공·사연금제도 III: 아시아·태평양」, 을 일부 수정]

2. 스웨덴

- 스웨덴의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는 1913년에 완전적립식 기여연금과 소득 및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보충연금으로 출발하였다.
- 1946년에는 자산조사가 수반되는 보충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였고, 1960년 소득비례연금인 부가연금을 도입하여 가입자가 기준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 이렇게 3개의 연금 제도가 중층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 스웨덴의 다층소득보장체계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0층의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Pension)은 연금소득조사(pension test)를 통해 연금수급액이 적은 노인, 빈곤 위험이 높은 노인을 선별하여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여타 공적연금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공공부조방식임
- 최저보장연금 외에 빈곤한 연금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Pensioners Housing Supplement)도 주요한 노후소득의 보충수단이 되고 있음
- 1층은 소득비례연금과 프리미엄연금으로 구분되지만, 두 연금이 하나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소득연금가입자는 자동으로 프리미엄연금에도 가입됨
- 소득비례연금은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주축이 되며 명목확정기여(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운영됨. 연금액은 생애소득, 퇴직연령, 현재의 임금수준, 인구전망 등에 따라 결정됨
- 프리미엄연금은 강제연금저축제도로써 소득비례연금의 전체 보험료(18.5%) 중 일부(2.5%)를 민간보험회사,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연금펀드에 연금계정을 만들어 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므로, 연금액은 각자 선택한 펀드의 투자성과에 따라 정해짐
- 2층의 직역연금은 노동자의 약 90%가 가입하고 있는 준강제연금으로, 포괄범위는 넓지만 노사협약에 따른 연금제도로써 사적연금으로 분류됨
- 단체협약을 맺는 중앙노조연맹 단위에 따라 블루칼라노동자연금, 화이트 칼라노동자연금, 중앙정부공무원연금, 지방정부공무원연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3층에는 개인저축 등 개인연금이 위치하고 있음

[표 22] 스웨덴의 다층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등	
2층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	
1층	프리미엄 연금(Premium Pension)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0층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Pension)	

대상자	피용근로자	자영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	-------	------	----------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해외공·사연금제도 I: 유럽」, 2012, 일부 수정]

3. 칠레

- 칠레의 연금제도 프로그램 중 공적 연금제도는 기초연대연금인 PBS, 최저보증연금제도인 APS, 군인 및 경찰연금, 그리고 AFP를 들 수 있다.
- 개인투자계정제도는 모든 피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도 2008년 7월부터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 1924년 민간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사회보험을 실시하였다.
- 1925년 피용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민간피용자기금, 공공부문 근로자 및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도입하였고, 1961년에는 최저연금보장 제도와 보조연금제도를 도입했다.
- 1980년 「행정법령 3500호」 개정에 의해 1981년 5월 1일 새로운 연금제도가 발효되었다. 개인투자계정의 도입, 확정기여, 최저보증 연금제도의 도입, 연금기금의 민간 관리, 가입자의 연금기금관리자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국가의 관리감독 역할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 200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 PBS와 APS를 신설하고, 여성과 저소득층 젊은이들을 위한 개인 연금 지원금 제공, 개인저축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 칠레의 다층소득보장체계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0층은 빈곤 방지, 1층은 의무적 기여에 의한 공적 연금제도, 2층은 자발적 저축 등의 사적 연금제도로 구성됨
- 0층에는 노령 또는 장애로 인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여연금인 기초연대연금(Pension Basica Solidaria: PBS)와 기여 연금인 연대연금급부(Aporte Previsional Solidario: APS)가 상호 보완하고 있음
- 1층에는 의무적 기여로 단일 연금기금관리기관(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AFP)이 관리하는 개인계정의 단일 금융투자제도. 급여방식은 근로기간 동안 기여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은퇴시점에서 개인마다 보유한 잔고에 따라 보험계리적 산식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방식임
- 2층에는 1층의 의무적 기여를 보완하기 위해 AFPs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발적 연금 저축계정을 둠

[표 23] 칠레의 다층소득보장제도

2층	개인연금, 저축 등
1층	개인별 연금계정(Pension Savings Account)
0층	APS(Aporte Previsional Solidario)
	PBS(Pension Basica Solidaria)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해외공·사연금제도 II: 아메리카」, 2012, 일부 수정]

4. 미국

○ 미국의 다층소득보장체계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0층의 보충소득제도는 자산조사에 의해 확인된 빈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

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임

- 1층의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은 사회보험에 기초한 공적연금제도로써 미국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으로 통용됨
- 65세이상 노인의 86.3%가 OASDI를 수급할 정도로 거의 보편적인 연금 제도임
- 공무원연금제도를 OASDI에 통합하면서, 1984년 이후에 임용된 연방공무원들은 모두 OASDI에 일괄 가입함
- 1984년 이전에 임용된 연방공무원들과 OASDI에 가입하지 않기로 선택한 주의 공무원들은 독자적인 직역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음
- 2층은 직역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직역연금은 확정급여(DB)형태의 사적연금, 확정기여(DC) 형태의 사적연금,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구분됨
- 개인연금은 전통적인 개인퇴직계정(IRA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과 로스개인퇴직계정(Roth IRAs)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3층은 개인 저축이 포함됨

[표 24] 미국의 다층소득보장제도

3층	개인저축		
2층	직역연금/IRAs 또는 Roth IRAs	공무원 부가 직역연금	연방공무원 퇴직연금(CERS) 및 지방공무원 퇴직연금
1층	OASDI (Old-aged,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0층	보충소득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대상자	피용근로자	자영업자	연방 및 지방공무원
-----	-------	------	------------

[자료제공: 국민연금연구원, 「해외공·사연금제도 II: 아메리카」, 2012, 일부 수정]

○ 1935년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OASDI는 다음과 같은 변천을 거친다.

- 1939년 퇴직자의 부양가족과 유족을 위한 급여 추가
- 1950년에 정규직 농업노동자, 가내노동자, 비농업 자영업자 등을 포괄함

- 1954년 자영농업자까지 포함함
- 1956년에는 장애연금이 추가되고, 1958년에는 장애근로자의 부양가족까지 급여를 확대함
- 1983년에는 연방공무원과 비영리조직 종사자까지 가입을 강제화하였음

5. 주요 해외 연기금 투자의 국가별 특성 비교

1) 캐나다공적연금(CPPIB)

- CPPIB 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중장기 기준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CPP Reference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을 변경하여 해외주식 배분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12년 4월 기준, 해외주식 비중이 55%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점차 편입되는 이머징마켓의 고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CPPIB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0% 수준이다.
- CPPIB 는 CPP 기금의 향후 성장세를 감안할 때, 700여 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CPPIB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나 거래 비중을 고려하면 운용상 제약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CPPIB 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내 경제를 벗어나 투자 분산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며, 현행 캐나다 주식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 주식시장이 세계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에 불과
 - 캐나다 주식시장이 천연자원과 금융서비스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 해외주식 투자비중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기대수익률을 제공하고 캐나다의 기대 이하 임금상승률에 따른 위험을 희석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일본공적연금(GPIF)

- GPIF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교적 유사한 경우로서, 고유 통화를 사용하고 자국통화에 의한 재정수입을 가지고 있다.
- 투자다변화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행하고는 있으나 국내시장우선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해외투자비중 결정시에 제약을 가하여 왔으며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국내주식 채권비중보다 낮도록, 그리고 해외채권은 해외주식비중보다 작도록 제약하고 있다.
- 2013년 11월, GPIF의 운용수익률 제고방안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 GPIF의 기존 운용방침과 주요 자산별 보유비중을 일본경제 환경에 맞도록 변경함
 - 벤치마크 전략 재검토: 국내 주식은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 주가지수인 TOPIX 외에도 JPX 니케이 인덱스 400과 같은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를 활용함
 - 해외자산 운용비율 제고
 - 디플레이션 탈피를 전제로 물가연동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함
 -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이사회에서 중요방침을 결정하고, 이사장과 별도의 업무집행 책임자를 선임하여 조직운영과 자금운용의 책임을 분리시킴
 - 투자결정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독립시킴

3) 스웨덴공적연금(AP3)

- 스웨덴은 국내 주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2000년에 제정된 「국민연금 기금법(National Pension Funds Act)」에서 자국 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스웨덴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5개의 기금 중 하나인 AP3가 해외주식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장기수익률 목표는 4%로 설정하고 있다.

4)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 ABP는 GDP대비 기금규모가 2011년 말 기준 40.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이다.
- 주식투자의 경우, 2012년 기준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0.7%에 불과하고 선진국 주식은 22.3%, 이머징 주식은 8%로 비교적 높다. 선진국 주식 중에서는 북미지역 투자비중이 41%, 유럽 투자비중이 4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채권투자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비교적 안전자산인 국채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6%를 차지하는데, 북미지역 국채 투자는 거의 없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순서로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회사채에 있어서는 북미지역이 47%, 유럽이 31%, 네덜란드 국내가 18%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 s Retirement System)는 2013년 9월말 기준 2,715억 달러(한화 291조원 상당)의 세계 5대 연기금이다.
- 운용기금 중 성장자산군으로 분류되는 공모주식과 사무조기에 각각 54% 와 12%를 투자하고, 실질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과 인프라에 각각 9%와 1%를 투자하는 등 위험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 미국 연기금 운용기관 중 최초로, 2013년 하반기에 공식적인 투자신념(Investment Belief)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alPERS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연금지급 능력 보장으로 이를 위해 부채를 고려한 기금운용과 인플레이션 헤지를 해야 함
-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비유동성 리스크를 획득하기 위한 투자를 하며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충분한 자산의 변동성은 감내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이슈들을 참여의 방식으로 다루며 원칙과 정책에 지지를 받는지,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에 영향을 주는지, 성공 가능성과 역량 등의 우선순위로 고려함
-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하여 강한 공조 체계가 필요하며 위험관리, 인적자본, 환경적 규범 등을 함께 고려함
- 투자목적과 성과측정이 연계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 핵심 척도인 장기 목표수익 설정, 기금의 장기목표와 직원 개인 간 성과의 조화, 외부 운용기관과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함
-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동적자산배분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되 장기투자기간과 자산규모 등의 특징을 반영함
- 부담한 위험에 대해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부담해야 함
- 운용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수익과 위험 그리고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함
- 광범위한 위험측정치와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부존량과 같은 장기투자자로서의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함
-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제약을 고려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높은 가치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역량 집중, 잘 체계화된 보상구조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 전문지식과 경험 및 투자신념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함

Ⅶ.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 정부 대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 현황

-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해는 2044년이며, 기금보유기간은 2060년이다. 이는 제2차 재정계산 결과와 수지적자 발생시점 및 적립금 보유기간은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제2차 및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비교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발생시점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2043년(2,561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제2차	2043년(2,465조원)	2044년	2060년(-214조원)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공청회(‘13.8.21)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

- 현 상황에서 즉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제4차 재정계산(2018년) 이전까지 재정운영방식 및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한다.
- 재정운영방식은 국민연금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부과방식은 향후 적립 기금 없이 당해 연금 지출을 조세 또는

보험료 수입으로 조달하는 방안이며(* 부과방식이라 하더라도 예비금 성격의 소규모 적립금 보유 가능) 적립방식은 보험료 수입 상향 또는 급여 지출 감소 등을 통해 기금소진을 지연시키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이다.

- 선택한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구체적 재정목표를 설정한다. 부과방식 채택 시 부과방식 전환 시점, 부과방식 전환 후 예비 기금 규모, 기금 소진 후 연금 급여 조달 방안(보험료 또는 조세지원) 등 설정이 필요 필요하다. 적립방식 채택 시 목표 달성 시점 및 목표 기금적립 규모 설정이 필요하다.

- 재정운영방식 및 재정목표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운영을 통하여 수립한다.
(2014~2017)

- 보험료 인상 등의 구체적 재정안정화 방안은 재정목표 설정 이후에 고려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 등의 급격한 제도 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목표가 설정된 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보험료 인상 필요성 및 인상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사적연금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 '8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개인연금('94), 퇴직연금('05)에 이어 기초 노령연금('08)이 도입되어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은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총체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큰 틀에서 볼 때, 노후소득보장의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노후소득금액은 퇴직전 소득의 60~70%로, 국민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이 40%(2028년, 40년 가입 기준)임을 감안하면 사적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화를 통한 전체 노후소득대체율 확보가 필요하다.

- 따라서 각 연금제도의 가입 실태, 노후소득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및 실무기간 관 협의를 강화하여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또한 공적연금(복지부), 퇴직연금(고용부), 개인연금(기재부, 금융위)을 관할하는 부처와 협력하여 전체적·체계적 노후소득보장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연금 내역을 일시에 조회할 수 있는 포털 구축으로 개인의 노후준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현행 국민연금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이어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이는 1988년 도입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소득이 없는 사실은 동일함에도 그간의 보험료 납부 수준과는 관계없이 혼인 여부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요건의 차이가 발생한다.
-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1소득자 1연금’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현행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수혜 체감도 상승을

피한다. 국민연금 수익비(보험료 대비 수급액)가 1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권 발생시점 연금액 지원 방식보다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이 장기적으로 재정 면에서 유리하다.

[표 26]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국고 지원액 추이

(단위 : 억원, 경상가)

구분		‘15년	‘20년	‘40년	‘60년	‘80년	14~83년 (조원)
출산 크레딧	현행(국고 30%, 연금액지원방식)	0	0	3,404	41,446	86,004	201
	변경(국고 30%, 보험료지원방식)	1,700	2,399	8,427	17,476	16,220	78
군복무 크레딧	현행(국고 100%, 연금액지원방식)	0	0	0	36,216	134,521	238
	변경(국고 100%, 보험료지원방식)	1,562	2,207	6,541	36,303	45,535	98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④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

- 현행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은 사각지대 축소에 한계가 있다. 보험료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이 사각지대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보다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노동자나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 등 대표적 취약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신규가입자 위주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사업장가입자 자격기준을 60시간미만으로 축소, 근로시간 기준을 단위 사업장에서 인별 합산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기준 개선을 함께 검토 중이다.

- 현행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 연령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소하는 제도로, 연령별로 지급(감액)률을 정한 현행 지급기준이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득재분배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고령자 근로에 친화적인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61~65세 기간에 연령별로 획일적 감액하는 것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값 초과소득 수준별로 감액률을 달리하여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있다.
- 또한 현행 장애판정 기준일은 완치일이 원칙이고, 초진일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안된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청구일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등 객관적 장애 상태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 시기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며,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유족연금액을 상승하여 부부가입자 등의 가입유인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

- 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장기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여 재정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따라서 3단계 자산배분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을 위한 규범적인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Norm Portfolio)를 설정한 후 전략적 자산배분 및 기술적 자산배분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ALM분석(Asset-Liability Management분석 : 제도, 인구, 경제, 계리, 투자, 시장을 하나의

통합적 모형 틀 내에서 분석하여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제도 변경과 기금의 장기 운용전략과의 조합을 도출한다.

-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의 지속 추진과 장기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민간 전문가 제언

1)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2008년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대여명의 상승과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 합계출산율변수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2008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0명일 때와 1.60명일 때 기금소진연도는 약 4년 정도 미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합계출산율의 0.4명 차이가 20년 뒤에는 14조, 30년 뒤에는 105조, 50년 뒤에는 1,291조의 재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법적으로 명시된 ‘출산크레딧’ 사업뿐이다.
- 출산율 제고 사업은 물론 국가의 몫이지만, 출산율이 장기 재정안정화에 핵심변수인 이상 국민연금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 기금운용조직의 전문화

-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이다. 이러한 특성상 기금운용위원회에 비전문위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전문 위원이라도 자신의 직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 및 실습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1년에 4~6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안전을 처리하는 현행 비상설 조직으로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성 제고

-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각 계층의 대표성에만 치중하여 전문성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승격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 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수급을 전담하고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기금운용공단에 독립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에게 맡겨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위탁운용 참여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 증권 및 채권의 위탁운용시 100% 외국 금융기관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위탁운용은 기금의 직접 운용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변동에

대한 헤지성과(hedge performance)가 낮은 측면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에게도 해외 위탁운용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해외 주식 및 채권 운용시 원화대비 수익률 추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환헤지(換 Hedge)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원화의 변동성 및 헤지(Hedge)에 경험이 많은 국내 금융기관을 대폭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포트폴리오 다변화

-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처는 채권으로 이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2014년 6월 기준 30.9%로 이는 해외 주요연기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 미국 CalPERS 65%,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50%, 노르웨이글로벌연금(GPF) 57.6% 등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외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익률 증대를 꾀한다면 연금자산의 조기고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연금연구원의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1% 상승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9년 연장된다.
- 중소형주 투자비중 확대 또한 필요하다. 국내 주식포트폴리오는 특히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대기업만 지원한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기금의 대형주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중소형주 투자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
 - 직접운용 시 패시브 운용((Passive Management) 방식을 점차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으로 변경
 - 위탁운용을 확대하여 중소형주 등 스타일 투자 확대
 - 스웨덴의 연기금형태와 같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기금을 따로 분리하거나 투자강제화

<참고: 스웨덴 연금구조>

-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은 AP~AP4, AP6의 5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
- 특히 AP6 기금은 스웨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스웨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중소형주, 비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를 하며 '06년부터 운용하여 '09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3.1% 달성하였다.

-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측면에서 대체투자비중을 높이고 있고 그 중 인프라 투자비중 역시 증가 추세이다. 대체투자 방식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는 전통적인 자산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연기금들은 별도의 인프라 투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가 성숙된 연기금일수록 인프라 펀드보다는 비상장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유럽지역 연기금 들은 인프라 투자학습을 점차 높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수익을 보장해 온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이 폐지 되었으므로 더욱 엄격한 인프라 사업성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출자 제한, 수익률 재조정 등이 필요 하며 장기적 시각에서 수요예측, 경제성 평가, 비용 효율화와 공기단축 등 인프라 투자안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인프라 투자 시 주로 현지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직접 투자증대를 통해 인프라 투자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 해외투자 대상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금융시장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다변화의 수단으로 해외투자를 투자전략의 주요 축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단, 해외자산 편입에 수반되는 위험 측정의 고도화 및 그 위험의 헷지방안, 투자위험 조기

경보시스템 등의 고려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정교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투자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과 한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 국부펀드, 사모펀드 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 전략적 제휴,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인프라·사모 등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투자의 적정비중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6) 시장 위험평가모형 개발

- 시장 유동성 약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하며,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자산 배분은 균등한 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장 지배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한도를 확대하는 유연한 전략도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지배적 규모로 인해 모든 위험을 흡수하는 일 방향 시스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따라서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금융안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위험평가모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출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기금운용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거시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국민연금은 아직 한창 성장하는 연금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도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점도 많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노후보장제도로써의 역할이 취약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으나 제도적 문제보다는 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험료율은 점점 오르는데 보장성은 떨어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기금의 안정성에만 치우치다보면 정작 국민의 복지에 적절히 그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고령화 속도 1위.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구조로 국민연금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겠는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해외 연기금을 통해 성장기인 국민연금이 가야할 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률을 높여 연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모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벗어나 대체투자자와 주식투자 등의 공격적인 고수익 창출 투자 방식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의 주체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문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대표성에 치우쳐 전문성을 뒷전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을 비전문가 손에 맡기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 운용본부의 독립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라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처 선정에 있어 신중하고 도덕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일본전범기업」 투자는 옳지 못한 결정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방식을 개선하여 이 투자 결정이 효율적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인지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곧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책임은 국가가 지기 때문에 국가 부도사태가 아니고서야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대부분은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포감이 이토록 큰 것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상보다는 국민연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못미더운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노인 인구 대다수가 국민연금 외의 별다른 노후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지금 어떻게 노후생계보장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여 고민할 때이다. 기금의 안정성에 국한되었던 논의를 넘어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노후 생계보장의 측면에서 연금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 연금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뚫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2013 국민연금통계연보’, 2014.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바로알기’, 2013.
- 국민연금연구원, ‘2014년 5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2014.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2013
- 국민연금연구원,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 2013.
- 금융투자협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2013
-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 2014.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과 과제’, 2012.
- 한국금융연구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 및 확대방안’,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2014.

2014 국정감사 정책백서

발행인 국회의원 이명수

감 수 주해돈 수석보좌관

편 집 김동희 비서관, 박선후 비서, 전그림 비서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2호

연락처 02) 784-5712, FAX 02) 788-0294
